

금융위기 상황에서 공적 신용보증의 중요성과 역할

김 자 봉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 I. 문제제기
- II. 공적 신용보증 규모의 확대 필요성
- III. 탄력적 부분보증제도 도입방안
- IV. 결론

* 본 연구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이며 신용보증기금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I. 문제제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은행은 BIS비율 유지부담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력을 갖지 못한 상황이다. 자본시장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은 거의 전무하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대출은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큰 비중의 은행대출은 금융위기로 인하여 확대 보다는 감소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에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 가운데 8.6%가 감소하였다.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상황의 반복을 배제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이 예상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제한적 방안 가운데 하나는 공적 신용보증이다. 신용보증이 중요한 까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바젤Ⅱ에서는 공적 신용보증의 위험가중치가 바젤Ⅰ의 10%에 비하여 0%로 감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은행은 공적 신용보증을 전제로 위험가중치 적립의무에 따른 대출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기존대출규모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11%를 더 대출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경기변동으로부터 은행 대차대조표상 공적 보증대상 자산의 건전성은 훼손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따른 만기연장곤란 및 회수, 그리고 이에 따른 은행건전성 악화와 같은 악순환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둘째, 신용보증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경기변동에 대한 조절기능을 행하여 왔다. 아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 당시 1997년 공적 신용보증은 92.4% 증가하였다. 외환위기를 지난 99년에는 -5.6%로 감소하는 등 경기변동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대비 신용보증의 비중 역시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1997년 14%에서 1998년 25.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4년 24.6%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12.5%로 크게 감소하였다. 보증잔액의 GDP 대비 비율은 1997년 3.5%에서 1998년 6.8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3년 6.23%를 유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4.82%로 낮아졌다.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크게 증가한 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이다.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된다. 첫째, 고용 둘째, 부가가치 창출능력 셋째, 소득분배기능이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기업체 가운데 99.4%가 중소기업체이고, 전체 고용자 수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중이 76%,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8% 수준에 이른다. 자본생산성은 2007년 대기업이 21.56%인 반면 중소기업은 26.26%로 중소기업이 더 높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07년 대기업이 60.66%인 반면, 중소기업은 80.9%에 이른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조달실적이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2008년 들어 최근에 이르기까지 자금조달실적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그림 2>의 자금곤란지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자금곤란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중소기업 지원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공적 신용보증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경기불황기에 신용보증이 행하는 경기대응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보증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지원 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림 1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자금조달실적 SB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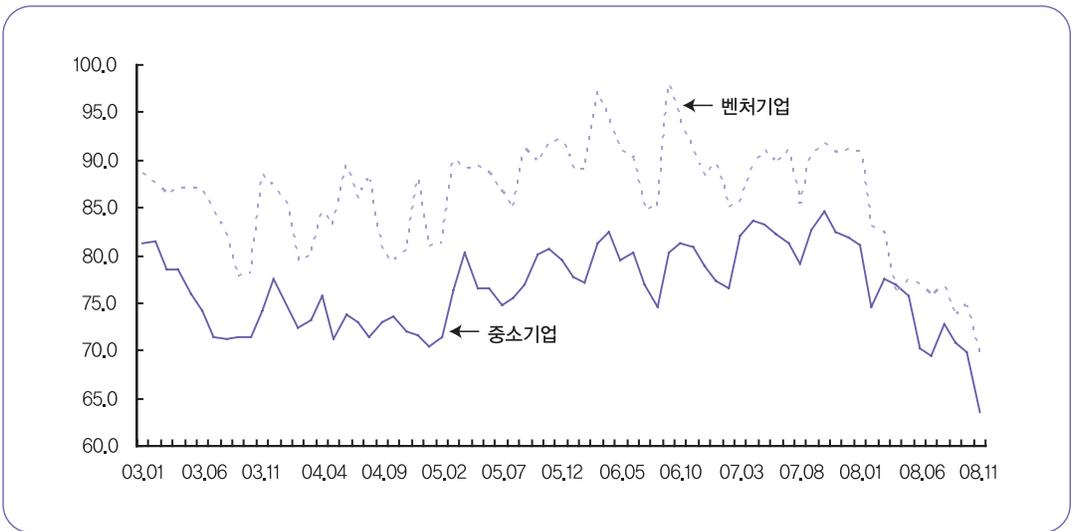


그림 2 중소기업 자금조달곤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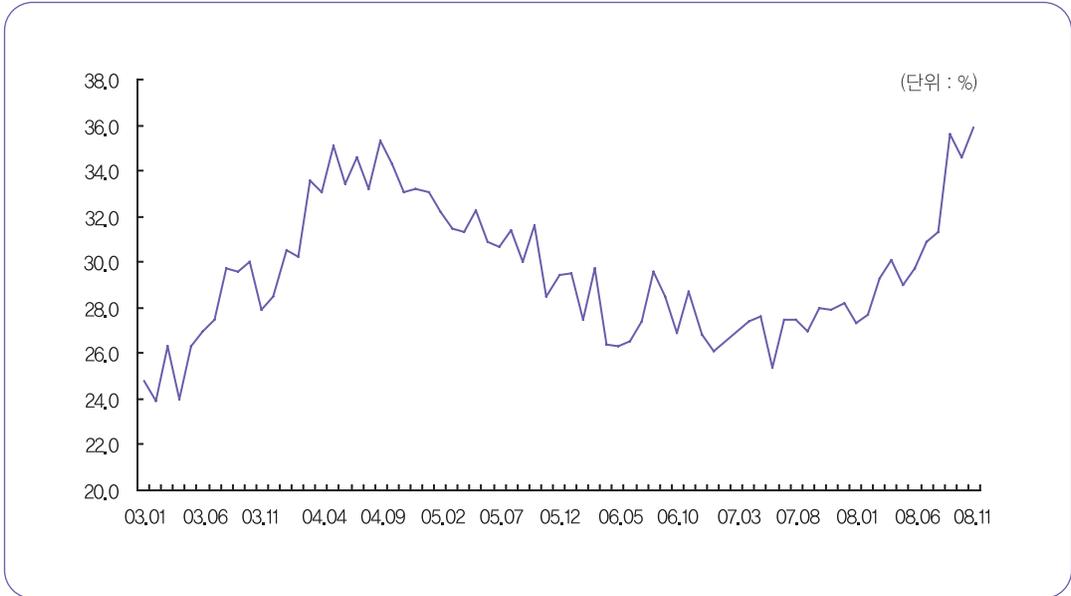


그림 3 신용보증과 경기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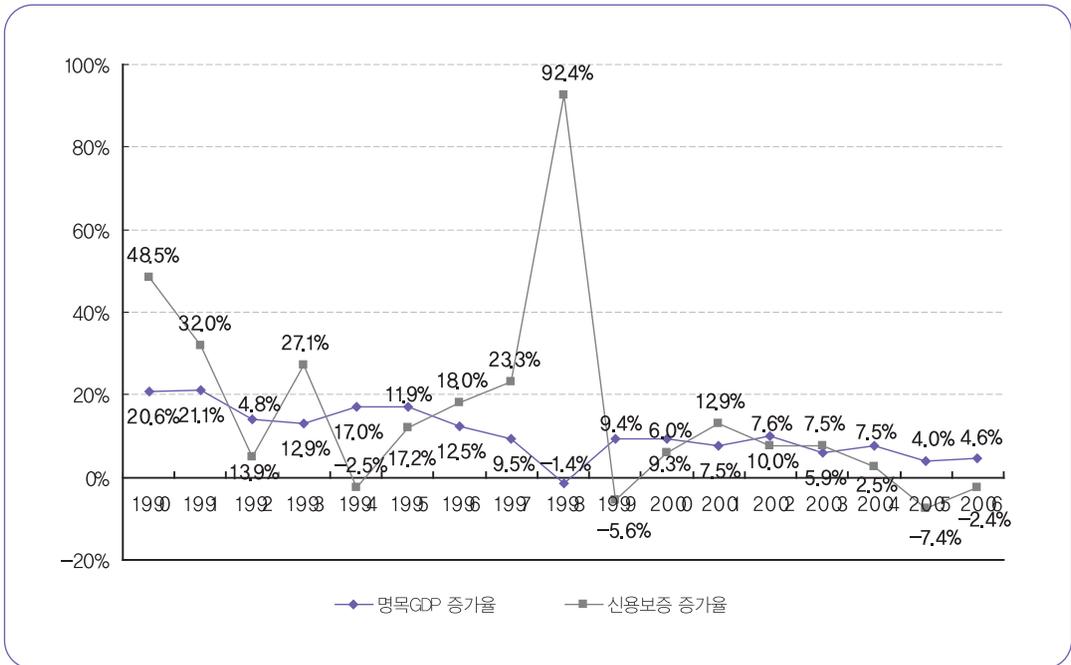


표 1 | 각 연도별 은행 중소기업대출 대비 신용보증 추이(%)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14.0	25.4	21.2	24.1	24.6	21.5	19.7	19.7	17.9	15.1	12.5

표 2 | 보증공급 규모와 GDP 대비 보증잔액 비율

(단위:억원)

구 분	보증잔액(총계)	증가율	신 보	기 보	재 단	GDP 대비 보증잔액
1997	171,692		113,286	57,235	1,171	3.50%
1998	330,191	92.3%	214,542	113,402	2,247	6.82%
1999	314,858	-4.6%	196,209	113,055	5,594	5.95%
2000	361,003	14.7%	225,912	124,977	10,114	6.24%
2001	385,178	6.7%	232,672	137,448	15,058	6.19%
2002	417,474	8.4%	256,885	141,263	19,326	6.10%
2003	451,246	8.1%	283,933	144,190	23,123	6.23%
2004	465,183	3.1%	305,148	133,766	26,269	5.97%
2005	440,674	-5.3%	291,528	115,013	34,133	5.44%
2006	437,077	-0.8%	285,243	111,508	40,326	5.15%
2007	443,748	1.5%	285,422	112,459	45,867	4.92%

II. 공적 신용보증 규모의 확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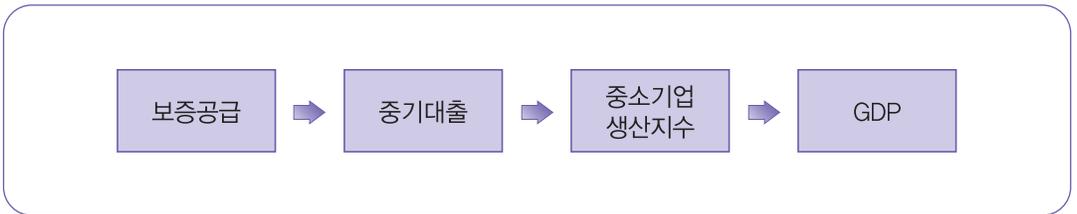
최근 금융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보증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값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적 보증규모는 정책금융의 일환이므로 보증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정책목표를 염두에 두느냐이다.

공적 신용보증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공적 보증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둘째,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로 되는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역할이 큰 특정의 산업부문 예를 들면 부품소재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이를 위한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위기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부품소재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적 신용보증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일정 수준의 지원규모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원활하게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수준에 이르는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이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GDP 증가에 크게 기여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신용보증이 GDP에 미치는 파급경로는 <그림 4>와 같다. 파급경로를 각 단계별로 구분하면 특정 수준의 GD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공급 규모를 추정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림 4 신용보증이 GDP에 미치는 파급경로



필요 보증규모를 결정하는 절차는 그림과는 반대방향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로, 정책당국은 목표 GDP 성장률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의 GDP 기여분(K)을 결정해야 한다. 전체 GDP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이외의 경제주체의 기여의 합으로 구성된다.

$$GDP_{\text{전체}} = GDP_{\text{중소기업이외}} + GDP_{\text{중소기업}}$$

$$K = GDP_{\text{중소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y)의 GDP 기여도를 k라고 하면 $ky = K$ 을 충족시키는 $y = \frac{K}{k}$ 을 찾을 수 있고, 이는 목표 GDP 달성을 위해 필요한 생산지수 수준을 나타낸다.

두 번째 단계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x)이 중소기업 생산지수 (y)에 미치는 영향(β)을 추정한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목표 GDP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지수의 증가(y)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출수준(x) 및 보증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beta x = y$ 이며, 위의 결과와 결합하면 $\beta k x = K$ 인 파급 경로식이 구해진다. 이로부터 특정 수준의 GDP 실현을 위한 필요대출 규모는 $x = \frac{1}{\beta} \frac{K}{k}$ 로 도출된다. 불황기에는 GDP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보증규모는 이에 따라 자연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변동을 조절하기 위한 기능에 의하여 오히려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기 마련이다. 경기불황이 보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파급 경로식을 다음과 같이 변환하면 유용하다. 즉,

$$\dot{\beta} + \dot{k} + \dot{x} + \dot{z} = \dot{K}$$

불황기에는 은행대출의 증가율(\dot{x})과 중소기업 생산지수 증가율(\dot{k})의 감소가 나타난다. 또한 은행대출이 생산지수에 미치는 영향($\dot{\beta}$) 역시 낮아지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GDP 증가율(\dot{K}) 역시 감소한다. z 는 호황기에는 고려되지 않지만 불황기에는 고려되는 변수로 예를 들면 산업구조의 재편과 같은 정책변수를 나타낸다.

정책당국에 의한 공적 신용보증의 공급규모는 정책당국이 \dot{z} , $\dot{\beta}$, \dot{x} , \dot{k} 가운데 어느 제한된 변수만을 선택하는지 혹은 모두를 선택하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에 따라 $\dot{K} = 0$ 혹은 $\dot{K} > 0$ 이 결정된다. 만일 정부가 불황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dot{K} > 0$ 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갖는다면 신용보증규모는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표 3 | 보증지원 수준의 결정요인

보증지원의 목표수준	1단계 : 자금수요충족	2단계 : 기업구조조정포함	3단계 : 산업구조조정포함
결정요인	$\dot{x} + \dot{\beta}$	$\dot{x} + \dot{\beta} + \dot{k}$	$\dot{x} + \dot{\beta} + \dot{k} + \dot{z}$

최근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공적보증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불명확한 예측치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외환위기 당시 이루어진 보증규모 확

대사례에 비추어 필요보증규모를 추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외환위기 당시 GDP 대비 보증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보증규모를 도출할 수 있다.¹⁾ 당시 공적 보증규모는 GDP의 6.82%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동일한 수준을 고려한 보증규모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2008년 GDP가 2007년에 비하여 증가율이 약 3% 정도일 경우 약 928.1조원이므로 이에 따라 공적 신용보증의 규모는 약 63.3조원 수준에 이를 것이다.

둘째, 은행권의 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은 외환위기 당시 1998년의 경우 25.4% 수준에 이르렀다. 2007년에는 이 비율이 12.5% 수준으로 크게 낮아 졌는데, 이 비율이 다시 1998년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 수준의 두 배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필요 공적 보증 규모는 약 89조원 수준에 이른다.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은행비중은 높아지는 추세인 반면,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중은 반대로 낮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할 경우 은행대출 대비 비율에 따른 보증규모가 더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외환위기 당시 GDP의 감소와 신용보증의 증가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보증규모를 도출할 수도 있다. 2008년 예상 GDP 가운데 1998년과 동일한 감소율 -1.4%를 적용하면 GDP 감소분은 12.99조원이다. 1998년 당시 GDP 감소규모 대비 신용보증증가 비율은 2.285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필요 보증규모는 29.7조원이 된다. 따라서 현재 보증잔액 44.4조원과 합하면 필요보증잔액은 74.1조원이 된다.

이와 같은 간단한 계산 예에서 시사하는 바는, 현재 금융위기로 인하여 필요로 되는 보증규모는 63.3조원~89조원 수준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외환위기 당시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 대기업의 경우와 같이 대규모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시 급격히 증가한 보증지원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혹은 산업의 재편을 위한 측면보다는 불황에 따른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환위기 당시를 비추어 도출한 63.3조원~89조원 수준의 예상 필요 보증지원 규모도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압박의 해소를 위해 필요로 하는 <표 3>의 1단계에 해당하는 필요 보증규모에 해당한다. 만일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을 염두에 두는 <표 3>에서 2,3 단계에 해당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금융을 목표로 한다면 필요보증규모는 훨씬 더 큰 수준에 이를 것이다.

1) 물론 이와 같은 논의가 외환위기 당시와 동일한 상황이 전개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은 덜할 수도 더 할 수도 있다.

III. 탄력적 부분보증제도 도입방안

1. 현행 부분보증제도

현재 신보와 기보의 부분보증비율은 신용등급 및 보증이용기간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있다. 신보의 경우, 신용등급구간을 5개로 구분하고, 이용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부분보증비율이 50~85%, 이용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의 부분보증비율은 50~80%로 결정된다.

기보의 경우 10년(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 경우 12년) 초과 기업 및 비출연기관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는 부분보증비율을 5%p 감축하고, 만기 3년 이상 장기분할상환대출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는 5%p를 인상하고 있다. 한편, 기보의 경우 기술평가 보증 및 업력 5년 이내의 기술혁신 선도형 중소기업 보증에 대해 85%의 고정 부분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비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8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결정된 보증비율을 수용하기 힘든 경우 보증료율을 조정하여 부분보증 비율을 상향 적용할 수 있으며, 5%p 부분보증비율 상향 적용 시 0.2%p 보증료율을 가산하고 있다.

표 4 | 신보의 부분보증비율

신용등급	보증이용기간 10년 이하	보증이용기간 10년 초과
KS1등급	50%	50%
KS2~KS3등급	70%	65%
KA1~KA4등급	75%	70%
KB1~KB3등급	80%	75%
KB4~KE3등급	85%	80%

자료 : 신용보증기금

표 5 | 기보의 부분보증비율

재무 또는 기업평가등급	보증비율	보증비율가감
AAA ¹⁾	50%	· 10년(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 경우 12년) 초과 기업에 대한 보증 ²⁾ : -5%p · 비출연기관에 대한 보증 ³⁾ : -5%p · 만기 3년 이상 장기분할상환대출에 대한 보증 : +5%p
AA	75%	
A~BBB	80%	
BB~CCC	85%	
CC~D	90%	

주 : 1) AAA 기업 중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총자산 100억원 이상이며 당기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AA등급의 보증비율을 적용

2) 신·기보 및 재단의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신용등급 AA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한 보증만 적용, 신보 이용기간 합산 기준

3) 출연기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한국수출입은행 제외), 기보캐피탈, TG벤처, KTB Network, 산은캐피탈 등

자료 : 기술보증기금

표 6 | 기술보증기금의 평균 부분보증비율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부분보증비율	86.3%	86.1%	86.0%	86.4%	86.1%	84.9%	84.8%

2. 개선방안

신보 및 기보 등 공적 신용보증기구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 않는 정부기관이지만, 재정건전성의 측면에서 기대수익과 기대손실을 고려한다.

기대수익(expected gain)과 기대손실(expected loss)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기대수익은 보증지원규모에 대한 보증수수료 수입에 의하여 결정되고, 기대손실은 보증지원이 제공된 금융기관의 대출이 부도를 야기하고 보증기구가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발생한다.

기대이윤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보증기구의 기대이윤(Π)은 기대수익에서 기대손실을 차감한 값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보증지원을 받은 은행대출이 부도나는 경우 보증기구의 기대손실은 $paL + (1-p)0$ 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기대이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i = fN - p\alpha LN = (f - p\alpha L)N = (f - p\beta C)N$$

여기에서 f 는 보증수수료이고 N 은 보증건수, p 는 금융기관 대출이 부도날 확률, α 는 부분보증비율, L 은 은행의 보증지원 대상 대출이다. f, α, β, C, N 는 정책변수이며 p 는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위에서 정의한 기대이윤을 이용하여 보증수수료, 부분보증비율 및 보증건수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할 수 있다. 특히 기대이윤의 크기가 영(zero)이거나 혹은 영보다는 크지만 일정 규모로 제한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증수수료, 부분보증비율 및 보증건수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기대이윤의 크기는 이론적으로 음의 값을 지닐 수도 있다.

우선 기대이윤을 영(zero)으로 제한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는 보증대상 은행대출의 부도확률, 부분보증비율 및 대출규모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보증수수료는 부분보증비율, 운용배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대이윤을 일정 크기의 양(positive)의 값으로 정의하는 경우 기대이윤이 양의 값을 갖게 되는 유일한 조건은 보증수수료가 기대이윤이 영인 경우에 비하여 더 큰 값을 가질 때이다.

위에서 정의한 기대이윤 모델은 가장 단순한 경우로 모든 보증지원에 대하여 동일한 보증수수료 및 부분보증비율 등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만일 각각의 보증지원에 대하여 부도확률, 보증수수료, 부분보증비율이 상이하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분보증비율은 산업부문별 및 각각의 보증대상자에 대하여 차별화된 값을 지니게 된다.

$$\Pi = \sum_{i=1}^N (f_i - p_i \alpha_i \beta_i C)$$

부분보증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주요 이슈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부분보증비율정책 운용의 기본원칙과 허용 범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며, 두 번째로 부분보증비율정책이 바람직한 인센티브수단으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운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부분보증비율정책 운용의 기본원칙은 경기변동, 보증지원 수요자의 신용등급, 고용창출효과 및 생산유발효과 등을 고려하여 보증지원정책의 탄력적인 운용을 실현하는데 있

다. 위탁보증의 경우 부분보증비율의 정책목표는 수탁기구의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직접보증의 경우 보증지원을 공급받은 기업들을 신용등급, 부가가치 창출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별하고 차등화함으로써 보증지원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반영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부분보증비율은 경기변동 시기에 보증지원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고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가능하다. 즉, 경기상황 악화시 보증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보증규모가 지나치게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을 보여 왔는데, 부분보증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보증잔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도 보증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업의 신용등급, 보증이용기간에 따라 기준보증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업종별 차이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분보증비율정책이 바람직한 인센티브수단으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증을 받는 기업(업종)의 고용창출효과 및 생산유발효과 등에 따라 부분보증비율을 차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차등화를 고려하여 보증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별 생산유발효과에 기초하여 부분보증비율을 차등화 할 때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부분보증비율을 적용할 경우에 비하여 더 클 수 있다. 한국은행이 2007년에 발표한 2003년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생산유발계수는 최대 2.30에서 최소 1.14이다. 생산유발계수에 관계없이 67.5%로 고정된 부분보증비율을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생산유발효과는 $\sum_{i=1}^{27} (a_i c_i) = 33.14$ 이다. 반면, 생산유발계수의 크기에 따라 부분보증비율을 67.5%를 기준으로 상하 17.5%씩 조정하여 최대 85%에서 최소 50% 범위에서 차등화 하여 적용하면 보증이 생산유발계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sum_{i=1}^{27} (a_i b_i) = 33.94$ 이다.

둘째, 고용유발계수에 기초하여 부분보증비율을 차등화 할 경우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단순부분보증비율을 적용할 경우와 비교하여 더 큰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발계수에 관계없이 67.5%로 고정된 부분보증비율을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보증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sum_{i=1}^{27} (a_i c_i) = 204.84$ 이다. 반면, 고용유발계수의 크기에 따라 부분보증비율을 67.5%를 기준으로 최대 85%에서 최소 50% 범위에서 차등화 하여 적용한 결과 보증이 고용유발계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sum_{i=1}^{27} (a_i b_i) = 217.63$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고용창출효과와 생산유발효과를 고려하여 부분보증제도를 운용할 경우 한정된 보증재원으로 산업정책의 목적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 할 수 있으며,

생산 및 고용 등 국민경제측면에서 보다 큰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부분보증비율을 업종별 생산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를 반영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7 | 탄력적 부분보증비율이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부 문	생산유발 계수 (a)	탄력적 부분보증비율 (b)	단순부분 보증비율 (c)	탄력적 제도의 생산유발효과 (a×b)	기존제도의 생산유발효과 (a×c)
수송장비	2.30	0.85	0.675	1.96	1.55
제1차금속	2.27	0.84	0.675	1.90	1.53
일반기계	2.18	0.82	0.675	1.79	1.47
금속제품	2.16	0.81	0.675	1.75	1.46
인쇄, 출판및복제	2.13	0.80	0.675	1.70	1.44
비금속광물제품	2.06	0.78	0.675	1.61	1.39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2.03	0.77	0.675	1.56	1.37
음식료품	2.02	0.76	0.675	1.53	1.36
화학제품	2.00	0.74	0.675	1.49	1.35
건설	1.98	0.73	0.675	1.44	1.34
섬유, 가죽제품	1.98	0.72	0.675	1.41	1.33
목재, 종이제품	1.93	0.70	0.675	1.36	1.30
음식점및숙박	1.92	0.69	0.675	1.32	1.30
정밀기기	1.87	0.68	0.675	1.26	1.26
사회및기타서비스	1.85	0.66	0.675	1.23	1.25
전기, 전자기기	1.71	0.65	0.675	1.11	1.16
농림수산물	1.68	0.63	0.675	1.07	1.13
도소매	1.60	0.62	0.675	0.99	1.08
통신및방송	1.58	0.61	0.675	0.96	1.07
광산품	1.57	0.59	0.675	0.94	1.06
교육및보건	1.55	0.58	0.675	0.90	1.05
운수및보관	1.55	0.57	0.675	0.88	1.05
공공행정및국방	1.54	0.55	0.675	0.86	1.0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52	0.54	0.675	0.82	1.03
전력가스및수도	1.49	0.53	0.675	0.79	1.01
금융및보험	1.46	0.51	0.675	0.75	0.99
석유, 석탄제품	1.14	0.50	0.675	0.57	0.77
$\sum_{i=1}^{27}(a_i b_i), \sum_{i=1}^{27}(a_i c_i),$				33.94	33.14

주) 이 표는 부분보증비율이 67.5%라고 가정하고 결과이며, 만일 부분보증비율을 85%라고 가정하는 경우 표의 마지막 세 열의 값이 바뀌게 될 것임.

표 8 | 탄력적 부분보증비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부 문	고용유발 계수 (a)	탄력적 부분보증비율 (b)	단순부분 보증비율 (c)	탄력적 제도의 고용유발효과 (a×b)	기존제도의 고용유발효과 (a×c)
도소매	19.57	0.85	0.675	16.64	13.21
교육및보건	18.50	0.84	0.675	15.48	12.49
사회및기타서비스	17.98	0.82	0.675	14.80	12.14
음식점및숙박	17.67	0.81	0.6751	4.31	11.93
건설	16.32	0.80	0.675	12.99	11.01
인쇄,출판및복제	15.25	0.78	0.675	11.94	10.30
공공행정및국방	14.72	0.77	0.675	11.33	9.94
섬유,가죽제품	14.69	0.76	0.675	11.10	9.92
운수및보관	13.37	0.74	0.675	9.92	9.02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13.06	0.73	0.675	9.52	8.81
정밀기기	12.74	0.72	0.675	9.12	8.60
금속제품	12.42	0.70	0.675	8.72	8.38
일반기계	11.45	0.69	0.675	7.88	7.73
금융및보험	10.74	0.68	0.675	7.25	7.25
목재,종이제품	10.38	0.66	0.675	6.87	7.01
비금속광물제품	10.10	0.65	0.675	6.54	6.82
수송장비	9.21	0.63	0.675	5.84	6.22
부동산및사업서비스	8.72	0.62	0.675	5.41	5.88
음식료품	8.32	0.61	0.675	5.06	5.62
화학제품	8.15	0.59	0.675	4.84	5.50
광산품	8.05	0.58	0.675	4.68	5.44
전기,전자기기	7.52	0.57	0.675	4.27	5.08
농림수산물	7.09	0.55	0.675	3.93	4.79
통신및방송	6.91	0.54	0.675	3.73	4.66
제1차금속	5.65	0.53	0.675	2.98	3.81
전력가스및수도	3.93	0.51	0.675	2.02	2.65
석유,석탄제품	0.95	0.50	0.675	0.48	0.64
$\sum_{i=1}^{27}(a_i b_i), \sum_{i=1}^{27}(a_i c_i),$				217.63	204.84

주) 이 표는 부분보증비율이 67.5%라고 가정하고 결과이며, 만일 부분보증비율을 85%라고 가정하는 경우 표의 마지막 세 열의 값이 바뀌게 될 것임.

IV. 결론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극히 제한된 방안 가운데 하나는 공적 신용보증의 확대이다. 은행은 바젤 기준에 따른 BIS비율 유지부담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자본시장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은 거의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극히 제한된 방법 가운데 하나는 공적 신용보증이다.

외환위기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공적 신용보증은 경기변동 특히 불황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기능을 담당해 왔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보증규모는 전년에 비하여 92.4%가 증가하는 등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공적 보증규모가 증가해야 하는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외환위기에 비하여 상황은 덜 할 수도 있지만 더할 수도 있다. 외환위기 당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필요 보증규모는 63.3조원~89조원 수준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만일 기업의 자금 수요해소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혹은 산업의 재편을 목표로 하는 경우 필요 보증규모는 더욱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탄력적 부분보증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신용등급과 보증이용기간을 기준으로 한 부분보증비율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따름인데,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및 생산유발계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부분보증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한된 보증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현재와 같은 불황기에는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다만,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함에 있어서 외환위기 당시 비효율적 보증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